

순이익 전망치 적용시 상단 3530... 기준금리·고율관세 변수

코스피 신고가 랠리

李 정부, 자본시장 친화정책 지속
삼성·SK 등 주요기업 실적 탄탄
“중장기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증시의 상승세를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와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1% 이상일 것이란 전망, 자본시장 친화정책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계무대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써가는 한국 대표 기업들의 저력이 기록 경신의 밑바탕이 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증시가 몇몇 위험 변수로 일시적인 조정을 겪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대주주 50억 유지 등 겹호재

코스피는 올해들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가장 높은 42.00%의 상승률을 보였다. 독일(19.03%), 중국(15.18%), 미국(11.94%)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신진지를 여는 데는 역시 외국인투자자의 힘이 컸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에서 11조50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안을 찾아 세계 금융시장을 떠돌고



한국 증시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을 넘어선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있다. 7월에는 미국 기술주, 8월에는 한생·넷케이 강세가 돋보였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투자대안으로 선택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 42곳이 내놓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9%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한 소비 확대로 내수가 다소 회복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전망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41개 기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제외한 41개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예상과 같은 1.8%였다. 한은의 전망치(1.6%)보다 2%포인트 높

았다.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도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훈풍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나빠졌으나, 시장은 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라고 받아들

였다.

또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오라클이 인공지능(AI) 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매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주 주가의 상승을 자극했다. 이날 삼성전자(1.72%)와 SK하이닉스(0.23%)는 나란히 증시를 견인했다.

◆ 상승에 무게, 그래도 ‘국지적 파도’는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증시가 일시적 조정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프랑스 등 유럽 재정위기와 미·중 갈등 등 해외 악재가 언제든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

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비미국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 노력 또한 확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해서다. 증권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시장전망치는 204조원, 내년 전망치는 238조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이 관세 전쟁의 파고를 극복한다면 순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증시의 재평가가 이뤄져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인 190조원에 이르는 2021년 코스피 최고점이 3316이었다”며 “이를 올해 순이익 전망치 203조원에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을 3530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2020년 말~2021년 초엔 12개월 선형 주가수익비율이 13을 넘었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10일부터 5조9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언제든 한국 증시를 떠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신해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증시를 떠받쳐야 할 개인투자자들이 여전히 증시를 외면한다면 외국인의 힘만으로는 상승장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하 기자 godhe@metroseoul.co.kr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경영진 중대재해 책임 강화
김영훈 장관 “안전투자 이익구조 확립”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말소를 요청해 영업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를 도입한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금융·보험 등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산업재해는 소액 벌금과 집행유예에 그쳐 기업이 위험을 방치해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적자가 난 기업이나 영업이익 산정이 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가능한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하한액이 적용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차등 부과되며, 공정성을 위해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징수된 재원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예방 활동에 재투입된다.

특히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사망사고로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가 되면 신규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를 건설

업 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시장을 통한 압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기업 대출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과정에도 안전도 평가를 도입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는 선분양 제한 등 추가 규제도 검토된다.

상장사에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판단자료로 활용돼 ESG(환

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반영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며,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장이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되며, 민간기업 역시 적정 공사비·공사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안전비용을 하청에 전가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정례화되고,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만 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의 감독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자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법’을 제정해 전국 단위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2조 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설비와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고, AI 기반 안전

기술을 확산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고령노동자에게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해 안전규범을 만들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사고조사와 수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송치된다.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은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인 힘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